광주상의 신년인사 "경제 살리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5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전남 기관장, 경제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

"선거사범 재판 신속·엄정하게 진행"

정갑주 광주지법원장 신년 간담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정갑주 광주지법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선거 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해 지역 사회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선거 재판은 당사자들의 주장, 증인신청 등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1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지역 사회의 불안도 그만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선거 관련 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신속성과 함께 정밀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최근 법원이 강조해온 공판중심·법정중심의 재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법정중심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단기간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참여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사의 경우 구술심리를, 형사는 공판중심으로 법정에서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고, 모든 사건이 법정에서 결론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인적·물적 보완, 특히 담당 법관과 검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법원을 잘 이해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선 법원과 국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져야 하며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등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원 안팎의 '소통의 중요성'은 지난해 발족한 '소통개선위원회' 활동 등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미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벤치마킹 의사를 밝힌 '소통개선위'의 활동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등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

6·2 지방선거 핫이슈

'정치인 교육감' 나올까

실는 순서
1. 민주 공천 방식
2. 단체장 3선 도전
3. 시·도교육감 향방
4. 다당제 경합 가능?

첫 주민직선…후보 교육경력 등 폐지 추진

광주 현직 프리미엄·전남 3선 여부 관심

6·2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사상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선거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정지역을 떠나 좁게는 '내 자식의 미래'를, 넓게는 '내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번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치인 출신도 입후보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시교육감 후보로는 안순일 현 교육감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윤영월 광주예고 교장, 김영수 전 삼도초 교장, 탁인석 전 광주대 교수,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종현 무등중 교장 등 8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이 붙은 안순일 교육감은 '5년간 수능 전국 1위' 등 '실력 광주'의 명성까지 쌓은 상태여서 현재 후보군 중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안 교육감 외에도 지난 2006년 시 교육감 선거에서 안 교육감과 결선 투표 끝에 아쉽게 낙마한 윤영월 교장(여)이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위원과 중등교사, 대학교수, 폴리텍대학 학장 등을 두루 경험한 '마당발' 탁인석 전 광주대 교수도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선 지난해 10월 퇴임한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의 3선(選) 성공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내 성과인 낙후된 전남교육의 발전 등을 내세우며 3선을 자신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과 함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과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등도 저마다 당선을 확신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여부가 시·도 교육감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나 교수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후보자의 출마 전 정당 경력 제한 2년에서 6개월로 감축 등이다.

이에 따라 '출마 전 정당 경력 제한(2년)', '교육경력 5년 이상' 등의 조항에 묶여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지명도 높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도 "그동안 교육감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선출한 교육계 인사가 맡아왔는 데, 법 개정으로 외부인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지역 교육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벌써 교육계 내부에선 법 개정 여부를 놓고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기초단체장 대거 물갈이 예고

■ 민주당 혁신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결정

지방의원 15% 전략공천 여성·청년 배려

시·도당, 자치단체장 등 반발 진통일 듯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5일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에 대해 15%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혁공천과 범 개혁·민주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통합과 혁신위가 이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상당수 시·도당위원장과 현역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를 거치는 최종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호남 기초단체장 대거 물갈이 예고=통합과 혁신위가 도입하기로 한 배심원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로 후보를 압축한 뒤 지역시민 50%, 중앙 전문가 50%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 당원의 기득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기로 해 정치신인과 시민사회 등의 정치적 진출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틀이 될 것이란 게 혁신위 측의 기대다.

혁신위는 배심원제 도입 지역을 전략적 선택 또는 시·도당의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일단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중 당선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50~60개 지역이 관심대상" 이라고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정 규모란 의미는 30만~50만명 이상의 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군도 가능하기는 하나 대상지역이 너무 넓어 공정한 풀 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심원제를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배심원제는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과 수도권의 기초시과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공천에 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배심원단을 중앙당이 지역과 중앙의 배심원단 풀을 따로 구성,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의 인위적 개입을 막기 위해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많아야 2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배심원제를 1월 중에 최종 결정, 2월 중순 이전에 1차로 대상지역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15% 전략공천 도입=혁신위가 이날 지방의원에 한해 15%를 전략공천하기로 한 것은 지방선거 연대와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헌에 전략공천의 목적을 이 같이 명시, 정치적 목적으로 전략공천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한나라당에 맞서는 단일 대오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유능한 정치신인의 기회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은? =최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은 국민참여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며 "다음주에 열릴 통합과 혁신위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광역단체장 공천에 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이날 국민 경선안과 관련, ▲국민 100% ▲당원 50 + 국민 50 ▲당원 50 + 국민 50(여론조사) ▲당원 40 + 국민 40 + 여론 20 등의 방안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대상으로 다음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방법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